

▲ 코스피 8476.48 (+81.83)	▼ 코스닥 916.18 (-4.39)
▼ 금리 (연이자율) 3.703 (-0.030)	▲ 환율 (원/달러) 1549.85 (+4.65)

롯데, 한일 합작법인
초임기
신유열 전면에
02



‘맨땅에 헤딩’ 전공정... 장기계획 필요

AI 호남 반도체 시대

①800조 투자, 현실의 벽은

전공정, 칩 직접 만드는 핵심 부지에 전력·용수 인프라와 고급인력·협력사 다 모여야 5~10년 장기적 계획 세워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전공정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부지와 착공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업이 여러 후보지를 놓고 입지를 고르는 미국과 달리 정부가 호남을 특정해 추진하는 방식이어서, 전공정 특유의 까다로운 입지 조건과 맞물려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3면>

30일 양사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서남권 반도체에 각각 400조원씩 투입해 메모리 팹을 2기씩, 총 4기를 짓는다. 삼성전자는 광주를 후보지로 제시했고 SK하이닉스는 서남권을 부지로 정했으나 구체적인 위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두 거점 모두 칩을 직접 만드는 전공정 중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앞서 SK하이닉스의 AI 반도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후속 보고회에도 부지 깜깜... “미국은 기업이 선택”

이에 시장의 관심은 서남권 투자 보고회로 쏠렸다. 정부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고 투자협약 체결과 함께 기업별 입지 지원방안 등을 공개했다. 다만 양사는 전날 발표한 내용 외에 구체적인 부지나 건립 일정을 추가로 제시하지 않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광주 첨단3지구와

해남 솔라시도, 광주군 공항부지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

투자 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정부가 호남을 미리 정해놓고 기업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외압설을 일축했다.

정부 주도로 입지가 정해진

방식 자체에도 평가가 엇갈린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은 여러 주정부가 경쟁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시하면 기업이 그중에서 고르는 방식인데, 이번은 호남을 특정해 ‘여기로 가져’는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선택권이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3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

AI시대 성공적 노후 위한 자산전략

최근 우리 사회는 늘어나는 평균 수명과 삶의 질 향상으로 평생 자산관리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100세 플러스 포럼’의 성공적인 출발을 토대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오는 7월 9일(목요일) 개최합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 및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AI 시대에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상속, 증여 전략, 부동산, 금융자산, 대체투자 및 미래투자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2)
- ◆ 주 제 :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
- ◆ 일 시 : 7월 9일(목)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1시40분~ 2시)
-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 문 의 :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산업생산 0.3% ↓... 두달째 감소

데이터처, 5월 산업활동동향 반도체·의약품 큰 폭 하락에 제조업 포함 광공업생산 3% ↓

산업생산이 두 달째 뒷걸음질했다. 지난 5월 생산 감소가 제조업에서 두드러졌는데, 지난 1분기 호황을 누리던 반도체 부문의 생산이 10%나 줄어든 영향이다. 설비투자도 2개월 연속으로 내리막을 걸었다. 소비는 소폭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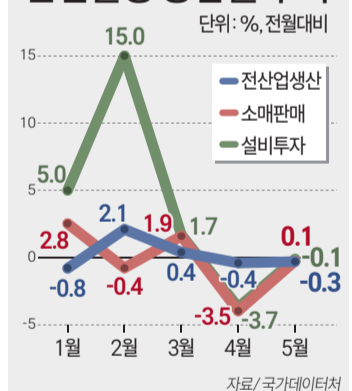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3% 감소했다.

산업생산은 1분기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 사태 등의 영향으로 4월(-0.4%)과 5월(-0.3%) ‘연속 감소’를 보였다.

특히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3.0%나 감소했다. 자동차(2.7%)와 석유정제(9.8%) 생산은 늘었지만 반도체(-10.0%)와 의약품(-17.5%) 등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출하는 2.4% 감소했다. 내수(-2.5%)와 수출(-2.3%) 출하가 모두 줄었다. 재고/출하비율은 101.8%로, 전월대비 4.0%포인트(p) 상승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1.1%로 2.2%p 저하했다.

산업활동 증감을 추이



서비스업 생산은 1.3% 늘었다. 금융·보험(5.9%), 전문·과학·기술(9.3%) 생산은 늘었고 정보통신(-3.0%)은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의 이득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생산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생산량이 조정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를 보여주는 5월 소매판매는 0.1% 증가했다. 4월 3.5% 크게 줄어든 뒤 5월에 증가로 전환한 것. 승용차 등 내구재(-3.4%) 판매는 크게 줄었지만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9%)와 의복 등 준내구재(2.3%)의 판매가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

동탄·기흥·구리 투기와열 지정... 집값 잡는다

국토부, 오늘부터 효력 발생 동탄 집값 올해 11.38% 상승 기흥 6.21%, 구리 7.78% ↑ 시장 냉각 vs 풍선효과 이견

전국 집값을 끌어올린 경기 화성 동탄을 비롯해 기흥과 구리가 1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오는 7월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효력 발생은 7월 1일부터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

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규제 지역 지정으로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동탄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지난 22일 기준으로 11.38%나 급등했다. 전국 평균치(1.55%)는 물론 수도권(3.01%)과 서울(4.82%)을 크게 웃돈다. 용인 기흥과 구리의 집값 상승률도 각각 6.21%, 7.78%에 달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등에서 모두 영향을 받는다.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으며, 최대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낮아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가 최고 12%까지 초과되며, 청약에서도 재당첨 제한이 10년까지 늘어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다음달 5일부터 내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규제 지역 지정에도 집값이 잡힐지는 미지수다. 이미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양 동안과 용인 수지도 올해 들어서만 각각 9.83%, 9.45%나 급등했다.

단기적으로 시장 냉각 효과는 있겠지만 수요가 여전히 탄탄한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양지역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규제 직후에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면서 가격 상승세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실수요와 투자수

요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원, 용인, 안양시 등 인접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규제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쉽지 않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공급 확대, 매입대확충,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이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뢰를 시장에 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공수처, 중수청 시행령안에 반대 의견 제출... “독립성·밀행성 훼손” /사진 뉴시스
- ▲정부, 사회연대경제 육성 본격화... 금융·세계·공공조달 지원 확대

- ▲기후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기준 고시... 1일 시행
- ▲‘415억 범죄수익 세탁’ 일당 22명 검거... 조폭 출신 총책 덮미

- ▲소방청, 여름철 현장안전 특별점검... 폭염·집중호우 대응
- ▲사육 곰 262마리 위한 보호시설 확충... 계도기간 만료